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國家安保環境 變化에 따른
防衛産業 發展方案 研究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2009年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國防經營專攻

金 華 鎮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善浩

國家安保環境 變化에 따른
防衛産業 發展方案 研究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Development plan and direction of the korea defense industry
to conform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國防經營專攻

金 華 鎮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善 浩

國 家 安 保 環 境 變 化 에 따 른
防 衛 產 業 發 展 方 案 研 究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Development plan and direction of the korea defense industry
to conform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

위 論 文 을 經 營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8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經 營 大 學 院

經 營 學 科

國 防 經 營 專 攻

金 華 鎭

金華鎮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目 次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4
II.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5
1.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5
2. 동북아 각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7
3. 새로운 안보 도전과 과제	14
III. 방위산업 발전과정과 현 실태	18
1.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18
2.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황	28
3. 방위산업의 문제점 분석	34
IV. 방위산업 발전방안	42
1. 방위력 개선 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체계 개선 편성	42
2. 방산 획득제도 개선	46
3. 방산수출과 가동률 향상 방안	49
VI. 결 론	55
참고 문헌	57
ABSTRACT	58

표 목 차

<표 1-1> 방산업체 경영실태	2
<표 2-1> 주변 4강의 국력 및 군사력 비교	5
<표 2-2> 2005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	11
<표 3-1> 국군 60년 변천사와 방위산업 발전의 관계	18
<표 3-2> 방위 산업 일반현황	29
<표 3-3> 연도별 주요 수출내용	30
<표 3-4> 전체 방산업체 경영실태	31
<표 3-5> 국내 방위산업체 경영성과	32
<표 3-6> 방산투자 규모	32
<표 3-7> 분야별 방산업체 지정 현황	32
<표 3-8> 전문화·계열화 지정 현황	33
<표 3-9> 국방비 증가율	34
<표 3-10> 세계 각국의 국방비	35
<표 3-11>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예산반영현황	36
<표 3-12>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예산반영현황	37
<표 3-13> 국방중기계획의 사업별 기준 연 부율	47
<표 3-14> 연도별 국방예산요구안 삭감·조정 현황	48
<표 3-15> 무기체계 예산 요구안 삭감·조정 현황	49
<표 4-1> 국방중기계획 기준 연 부율의 최소·최대치 설정	43
<표 4-2> 무기체계 획득 방법별 현황	46
<표 4-3> 군수무관 운용현황	50
<표 4-4> 정부차원의 후속군수지원 체계 보장 사례	51
<표 4-5> 국가별 방산분야 내수 의존도	53

I. 서 론

1. 연구 목적

현재 세계 각 국의 국방 분야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각국은 탈냉전 이후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종래의 군사안보 중심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인간안보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안보 개념의 광역화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 등에 기인한다. 특히 걸프전쟁과 이라크전쟁 등에서 여실히 증명된 전쟁양상의 변화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군사변혁이나 군사혁신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한국군도 2005년 9월 발표되어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면모를 띠하고 있다. 현대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군도 종래 병력위주의 군 구조에서 전력을 첨단화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군구조로의 개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¹⁾

사실 한국군 개혁노력의 출발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정보 시절부터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그 간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한국군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또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특히 전력 첨단화 요구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한다. 군은 보다 멀리보고, 보다 빠르며, 보다 정밀한 첨단 전력의 획득을 요구받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방위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예산의 운용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전력 첨단화와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분야가 방위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이 탈냉전 이후 상대적인 침체기에 있다고는 하지만, 국방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제에의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방위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개혁위원회, 2005, p.12

더욱이 최근 핵실험 등으로 국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력 강화는 방위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위산업의 중요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는 극히 저조하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최근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기본 병기들의 군 소요 충족으로 인한 소요불량의 감소로 가동률이 저조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1> 방산업체 경영실태(1998~2005)²⁾

구분	매출액	경상이익	가동률(%)	
			방산	제조업
1998	3조 3,875억 원	4,237억 원	52.8	68.2
1999	3조 1,211억 원	4,287억 원	50.8	76.6
2000	3조 3,359억 원	4,762억 원	48.5	78.3
2001	3조 7,013억 원	-1,149억 원	50.3	73.2
2002	4조 3,447억 원	253억 원	55.4	76.9
2003	4조 2,681억 원	555억 원	57.3	78.3
2004	4조 6,440억 원	863억 원	56.1	80.3
2005	5조 3,165억 원	1,486억 원	57.8	79.8

이와 같은 방산협력 확대나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증액 등은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여건에서 그것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군사기술의 자립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방향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력의 건설에는 장기간의 전력화 선행기간(lead-time)이 소요된다는 그 특성상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정책의 바탕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요구 된다.

즉, 새로운 무기체계가 연구개발·생산되어 실전에 배치되기까지는 최소 10~15년이 걸리고, 그것을 운용·유지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10~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³⁾ 무엇보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안정적

2)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 p.82

확보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말, 2007년도 국방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당초 요구액 6조 8,243억 원 중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 100억 원을 포함 총 1,436억 원이 삭감 또는 조정되었다.⁴⁾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예산요구안은 한국 국방기획 관리체계의 기획 단계에서 제기된 전력획득 소요를 바탕으로, 계획단계의 국방중기계획 안부액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 국방기획 관리체계의 최상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어 구체화된 한국 군사력 건설정책에 관한 예산요구안이 이번 경우와 같이 그 심의과정에서 삭감 또는 조정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한국 국방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확보에 있어서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한국의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크게 저해할 수밖에 없다. 군사력 건설사업 예산의 삭감 또는 조정은 기본적으로 해당 방산업체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해당 사업이 다음 해로 이월된다 하더라도 획득 장비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한국 방산업체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이다.

방위력개선사업비 편성 및 확보의 합리성·안정성 재고가 방산업체 대외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력적기 획득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의 국방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그것의 핵심 분야인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전력의 첨단화는 방위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의 편성과 확보면에 있어서 합리성과 안정성의 재고라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의 안보상황, 방위산업의 현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3) 권재상, “방위산업과 군사력 건설”, 제 40집, 2006, p.297

4)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12월 27일 새해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 24조 4,971억 원을 의결했다. 심의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당초 요구액 6조 8,243억 원에서 1,436억 원 삭감됐고, 경상운영비는 당초 요구액 17조 8,724억 원에서 500억 원이 삭감됐다. “내년 국방예산 24조 4,971억 원 확정.” 「국방일보」, 2006. 12. 28

기반으로 21세기 첨단 방위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연구범위는 국내방위산업의 문제점, 동북아의 안보현황, 국내 방위산업 실태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 관련 국방정책 및 연구 개발, 방위력 개선 사업비 예산편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문헌, 연구논문 등 문헌 조사방법과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국방대학교,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연구보고 자료를 위주로 하고 방위 산업분야 전문 문헌 및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안보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1.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동북아 지역은 유럽지역과 함께 서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표본이었으나 21세기에 들어 유럽은 빠르게 변모하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은 실제적으로 안보상황이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반도를 위요한 주변 4강은 <표 2-1>에서와 같이 미국을 최선두로 한참 쳐져서 중·일·러가 각축을 벌리면서 쫓아 군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표 2-1> 주변 4강의 국력 및 군사력 비교⁵⁾

구분	미	일	중	러	한국	(남+북)/북 한
영토(km ²)	963만	37.8만	959.7만	1,707.5만	9.9만	22만/12만
인구(명)	2억 9,000만	1억 2,700만	12억 9,000만	1조 4,500만	4,800만	7,000/2,200만
GDP(달러)	10조 9,800억	3조 5,670억	5조 7,000만	1조 2,870억	9,310억	9,537/227억
군사비(달러)	4,782억	425억	410억	210억	164억	216억/52억
핵보유	7,650기	·	400기	20,000기	·	· /핵실험중
병력(명)	143만	24만	240만	110만	68만	185만/117만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19세기 말에는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의 세력다툼의 무대였고, 냉전 시대에는 주변 강대국의 완충지대였다. 미래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세력균형에서 중요한 위치 혹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 점에서 미국과 일본이 해양세력으로 한 축을 이루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륙세력으로서 제후하여 대치할 가능성이

5) 권태영, “미·일·중·러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방위력”, 한국군사학회, 2005, p81

상존한다.⁶⁾한반도 통일 후에도 주변 4강의 경쟁 관계는 지속 유지 될 것이며, 그 원인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지리적 관계에 의한 영토문제 및 영유권 분쟁으로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의식이 상존하고 있다. 1873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동지나해 센카쿠 섬 영유권 문제, 1974년 중국이 베트남으로 부터 무력으로 점령한 파라셀군도,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북서 4개 도서(하보마이군도, 시코탄·구나시리·에토로후 섬) 반환 문제, 그리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들 간의 비록 적은 영토에 불과하지만 소유 그 자체 보다 해양 자원, 무역항로 안전, 해양 전략 수립 등 국가 전략적 가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 강화로 지역 내 불안정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붕괴와 영향력 감소, 상대적으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역할과 국제적 위상의 강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 세력균형의 불안정성과 중국과 일본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사건,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등으로 자국의 안보적 현실과 국익 증대를 위하여 실리위주 외교·안보전략을 추구하면서 일본과 신 방위협력 지침⁷⁾에 합의함으로써 지역 내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역할증대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동북아지역에서 세력균형자로 최소비용으로 이 지역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안보질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군사력 강화로 역할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며 러시아는 기득권 유지 및 군사적 강국을 견지함으로써 4개국 간 협력과 대립을 병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통일 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양자 구도로 유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 이민룡,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 2001, p43~44

7) 미국은 일본과 신 방위협력 지침 합의로 일본은 1980년대 까지는 전수 방위동맹, 2001년 9.11 사태 이전까지는 지역동맹, 9.11사태 이후는 세계 동맹으로 발전 하는데 물골을 터주었다.

2. 동북아 각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러시아의 안보정책

러시아는 현재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위협을 줄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 국내 적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경제 문제는 구소련의 경제파탄의 유산을 물려받아 피폐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각종 혼란과 무질서로 고통받고 있으며, 민족문제는 일부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하긴 했지만 체첸사태와 간은 민족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며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 마약, 매춘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사력 규모면에서는 아직도 세계 군사대국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경제와 이념적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2000년대에 러시아 정세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며 현재의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만약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끝없이 힘을 소모하는 힘없는 거인이 될 것이나 만약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강대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러시아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광활한 국토, 풍부한 자원 높은 과학기술 수준, 많은 인구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조건들을 조직화하지 못할 따름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 2000년 3월, 강한 러시아 부활을 내건 블라디미르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국내치안, 경제회복 외교 등 제반정책에서 성공적으로 지도를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9·11테러, 체첸사태, 국내테러 사건 발생 등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 재건설”을 추구하면서 “2015년까지 첨단군사기술 개발정책”, “2006~2015년까지의 국가 무기 프로그램 및 2020년까지의 무기·군사기술 발전방향”, “러시아군 발전의 당면과제”, “부분적 직업군인제 도입”, “국가방위조달위원회 설립”, “2010년 까지 군사 교육제도 개혁” 등 군사력 재건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⁸⁾

8) 김현수, “통일 한국을 위한 국방 정책 방향”, 한국군사학회, 2005, p36

러시아는 동북아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주변국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을 격파하는데 필요한 최저 군사력을 건설할 것이다.

2) 중국의 안보정책

구소련의 붕괴이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환경 변화 즉, 미국의 역할감소와 러시아 극동 군사력의 축소에 따라 이 지역의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중국이 이 틈을 이용 병력규모를 축소, 정예화하면서 군사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것이다.

21세기 ‘떠오르는 별’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세계적 패권경쟁 일본과의 지역 주도권경쟁, 대만과의 전쟁 발생 가능성 (미·일과 대결 가능성), 21세기형 군사혁신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근원적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가고 있다 군사력 건설 방향을 ‘대군주의’에서 ‘정예주의’로 바꾸고, 방위권역도 연안 방어 위주에서 인도양·동남 중국해로 확대하며, 전략개념 역시 국경 밖에서 싸우는 ‘적극방위’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미래 전쟁을 ‘첨단기술조건하의 국부·제한 전’으로 상정하고 ‘과학 기술형 강군육성’과 ‘질 위주의 군대 건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는 미래 하이테크 전쟁이세 승리하려면 선제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신속한 작전 전개로 단기간에 결판을 내야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병력의 정예화와 장비의 첨단화를 통한 군사력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지상군은 총 병력 70%를 점하는 170만 명으로 그 규모는 세계 제일이다.

특히, 최근 어느 곳이든 분쟁지역에 12시간 이내에 투입 가능한 긴급 전개부대를 편성하여 일차적으로 중국 영토 내에서 실시하는 작전능력과 아주 제한된 의미에서 중국 국경국가에 대한 군사개입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군의 경우에는 전자통신 체제, 사격통제 장치, 미사일 발사체제의 개선과 대잠능력 향상, 잠수함 전력건설 등 지속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연안위주 작전에 대양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국방과학 공업위 부주임인 국가우주국 순라이엔 국장은 중국 정부 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항공모함 건설능력을 점진적으로 갖추어나가고 있다”며 “유관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중공기관지 <인민일보>도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중국은 2010년 항공모함을 건설할 계획이다”며 “이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의 함재기제조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2016년까지 모두 3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투기 30~40대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건조의 성공에 따라 육군 중심의 군 편제에서 해·공군 전략 군사력 운용위주로 중심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미국의 대만 해협 개입 저지를 위해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양작전’ 능력을 갖추 미국과 맞서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군사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군은 아직 기술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기존 전투기의 결함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모형의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에 심취되어 있다.

중국의 핵전력은 기존의 핵보유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왔으며, 1200km의 사정거리인 동평-2, 2500~3000km의 사정거리인 동평-3의 중거리 미사일에 이어 7000km의 대륙간 탄도탄인 동평-4, 동평-5가 배치 되었으며, 최근에는 사거리가 12000km 미사일 개발 중에 있다.

중국의 우주계획은 1950년까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시작하여 1970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래 1988년 까지 23회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계획은 대륙간 탄도탄의 정확도 향상과 전술 핵전력의 지휘·통제·통신능력 제고, 군사정보 수집과 전략방어 능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래형 전쟁인 스타워즈(Star Wars)를 담당하는 부대도 창설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스타워즈가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화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텐권’으로 명명될 우주군 창설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대는 우주 작전부대, 우주 함대, 기지부대, 로켓 부대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며, 아마도 2030~2040년에는 실제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처럼 우주시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우주가 정보,

공중, 해양 및 지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 가공할 경제력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적 역량은 아시아 지역을 압도할 것이다. 이는 특히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대국화로의 강력한 유인요소가 될 것이며, 통일한국으로서는 국가생존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학계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고, 발해도 중국이었고 더 나아가 한강유역까지도 중국의 땅이었다고 날조된 역사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이들의 저의는 미래 통일한국에 위협이며 침략과 대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

미국은 세계 최강, 최첨단, 최정예의 초월적 군사력을 보유, 지구촌의 그 어떤 경쟁자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한 군사력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강자인 미국이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21세기 테러와의 전쟁’⁹⁾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시대의 군 변혁을 세계 최선두에서 과감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표 2-2>에서와 같이 세계 군사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연구개발 예산으로 15%이상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군사혁신 드라이브를 통해서, 핵의 소형화·정교화·고위력화, 지구적 차원의 정보 지배력 장악, 항공·우주공간에 대한 절대 우위의 통제력 확보, 전 지구적 차원의 원거리 신속 투사 전력과 장사정 정밀타격 전력의 확보, 무인 로봇 전투체계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에는 다른 경쟁자의 추종이 더욱 불가능할 정도의 절대 우위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 핵심적 국가 이익이 걸려 있다고 판단 지역 동맹국이 없이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없고, 나아가 아시아의 세력으로 남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9)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대폭발 테러사건의 배후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과 그가 조직한 알카에다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최초 전쟁을 개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영국의 국제 안보분야 옥스퍼드리서치 그룹은 테러 전쟁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표 2-2> 2005년 군사비 지출 상위 15개국

순 위	나 라	군사비 (10억 달러)	국민 1인당 군비(달러)	세계 군사비 대비 비중
1	미국	478.2	1604	48%
2	영국	48.3	809	5%
3	프랑스	46.2	763	5%
4	일본	42.5	329	4%
5	중국	41.0	312	4%
6	독일	33.2	401	3%
7	이탈리아	27.2	468	3%
8	사우디아라비아	25.2	1025	3%
9	러시아	21.0	147	2%
10	인도	20.4	185	2%
11	한국	16.4	344	2%
12	캐나다	10.6	327	1%
13	호주	10.5	522	1%
14	스페인	9.9	230	1%
15	이스라엘	9.6	1430	1%

요컨대, 미국의 아·태 전략의 핵심은 “일본을 끌어안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21세기 전략의 핵심은 점차 정치·경제·군사적 팽창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¹⁰⁾ 이를 위해 세계 전략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여 중국과 같은 지역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방지하고, 대규모 재래식 전력 및 대량 살상무기와 핵을 보유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역내 세력균형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은 앞으로도 역내 국가들과의 기존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전진 배치된 미군의 군사력 투사를 보장하여 역내 “위기 관리자” 또는 “안보보장자”¹¹⁾로서의 지도력을 계속 유지·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1951년 이후 대소봉쇄정책의

10)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연경문화사, 2004, p.279

11) 어떤 위기 상태에 기본적인 국가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면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둘러싼 모든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것이다.

일환으로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 등과의 일련의 쌍무적 동맹조약의 체결로 형성된 소위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들 국가들과의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였던 동맹관계는 지난 50여 년 동안 당사국들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해왔고 탈 냉전기에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가치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의 포위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미관계는 외형상 별무리 없이 유지될 것이나, 누가 미국의 국익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동북아 정책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탄력성을 유지 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안보정책

오늘날 일본은 미·일 안보협력 체제 속에 안주하여 미국의 방위력에 의존하면서 실리위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을 압도할 만큼 커졌으며, 군사력 면에서도 일본은 아시아 제일의 해군력과 공군력, 정보전력, 그리고 첨단 군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이 2004년 12월 방위대강을 재차 개정, 도약 적으로 군사력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일본이 9·11테러 참사 이후 변화된 전략 환경을 고려하여 국방 태세를 본질적으로 대전환 하고 있는 것이다. 병력과 장비의 수는 다소 축소하고 정보 전력과 해·공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방호전력을 파격적으로 정보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주변 해역을 훨씬 넘어 인도양 건너 중동지역까지 확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운용개념도 기존의 기반적·수세적·피동적인 태세에서 기동성을 갖춘 다기능·탄력적·공세적·실효적인 태세로 전환시켰다. 그간 일본이 유지해 온 평화헌법, 전수방위¹²⁾, 비핵 원칙, 무기 수출 금지 원칙 등을 교묘하게 탈색하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일본의 군사전략은 억제와 전수 방어로서 억제는 적에게 치명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전수 방어는 소규모 전쟁은 독자적

12)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자위를 위해 최소한의 방위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망각한 군을 바탕으로 먼저 한반도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것이다.¹³⁾ 현실적으로도 저들은 신사참배, 독도영유권 주장, 중·러와 도서 영유권 분쟁, 북 핵실험에 따른 아베신조 총리의 헌법 개정 주장을 통한 군사력 강화 등 저들의 아시아 패권 야욕을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⁴⁾ 통일 한국의 굳건한 안보유지만이 일본의 야욕을 뿌리내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안보 도전과 과제

1)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전쟁양상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점진적 혹은 급진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전쟁양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핵심적인 변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었으며,¹⁵⁾ 현대에 들어 과학기술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양상도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의 걸프전쟁과 이라크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여실히 보여 준 좋은 사례이다. 현재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래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양상도 4차원(우주전)화, 무인화 그리고 미사일 및 정보 진화의 양상으로 지속변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은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방위산업이다. 이는 한 국가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수단이 곧 방위산업이기 때문이며, 특히 탈냉전 이후 무기 수출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전쟁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하는 등 방위산업을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매우 크다고 할 수

13) 박영신, “남북통일 이후 군사력 운용방향”, 국방대학교 연구보고서, 2005, p.16~20

14) 한겨레 21, 「군사대국 일본이 진군한다」, 2006. 11, 제 635호, p.65

15) 박창권, 「과학기술과 미래 전」, 차영구·황병무 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4, p.316

있다.

전시소요 획득 차원에서도 전시생산, 우방국 지원, 해외조변, 치장 등 다양한 획득방법 중 품목, 수량, 장소 및 시기 4개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시생산임은 자명한 바,¹⁶⁾ 방위산업육성을 통한 평시 충분한 전시생산능력의 구비는 전쟁 승패는 물론 나아가 전쟁 억제에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실제 세계 각 국은 전쟁양상의 변화와 더불어 9·11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불특정 안보위협이 새로이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산업 기반 유지 및 경영 합리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¹⁷⁾

예를 들면 영국은 방산업체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방산 경쟁을 확대시키고 방산부문을 민수부문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외국과의 합작·공동생산 노력을 통해 국방비를 절감하고 있다.¹⁸⁾ 전쟁양상 변화와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세계적 방위산업 혁신 노력은 방위산업의 국가안보에의 기여도를 반증해 주는 것이며, 한국도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 등의 제도적 정비와 방산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¹⁹⁾

2) 첨단 과학기술과 방위산업

현대전을 흔히 과학기술의 전쟁이라고 부른다. 전쟁양상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주된 동인이 과학기술의 발전임은 진술한 바 있으며, 일찍이 미국 카터 행정부의 국방성 연구개발 차관이었던 페리는 “국방력 증강의 요체는 이용 가능한 최신평과학기술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 기간 내 전력화 하는 것이다”라고 전력 증강과 과학기술의 밀접한 관계를 역설하였다.²⁰⁾

Judith Reppy도 미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주요한 영향요소로

16) 김철환, 「방위산업의 이론과 실제」, 국방대학교, 2003, p.7

17) 옥황임, “방위산업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p.9

18) 구영완, 「방위산업의 이론과 실제」, 국방대학교, 2006, p.23

19) 국방부, 「2006 국방백서」, p.82~83

20) 김병수, “한국 방위산업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p.20

과학기술의 발전을 쫓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첨단기술 수준과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컴퓨터·전자·반도체·레이저, 항공·우주분야 등 대부분의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¹⁾

논의상 과학기술을 국방과학기술과 민수과학기술로 구분한다면, 1940년까지는 국방과학기술이 주축이 되어 기술혁신을 주도하였고, 1960년대부터는 경제학자 슬페터의 기술혁신 이론에 따라 제품의 대량생산과 가격저하로 인한 대량소비가 가속화되어 민수과학기술이 기술혁신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²⁾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자계산기, TV, 제트항공기 등은 가격이 매우 비싸 군사용으로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기술혁신에 따라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오늘날에는 민수분야에서 더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이후 고급 국방과학기술이 민수분야로 이전되어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²³⁾

이와 같이 국방과학기술과 민수과학기술은 더 이상 분리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세계 각국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에 최신 과학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우위가 곧 국방력의 우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육성은 방위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이고, 방위 산업 육성을 통한 신기술 개발이나 확보는 그것의 민수과학기술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한 국가의 산업기술발전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21) 미국은 냉전 후 위축된 군수산업을 민수분야와의 기술공유를 통해 육성코자 민군겸용기술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는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도 1999년부터 도입하였으나 관계부처의 정책우선순위가 낮아 주로 소규모 / 비주력 분야에만 적용 하면서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2) 김병수, 전개서, p.20~21

23) 국가안보보좌관, “국방과학기술 현황 및 발전전략”, NSC 보고자료, 2006

Ⅲ. 방위산업 발전과정과 현 실태

1. 방위사업의 발전과정

국군의 변천사는 크게 8단계로 건국기(1945. 8월~1950. 6월), 한국전쟁기(1950. 6. 25일~1953. 7월), 전쟁 피해복구 및 재건기(1953. 8월~1961. 6월),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년), 국군의 월남파병(1964~1973년),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1980년), 자주국방 강화기(1981~1990년), 자주국방 발전기(1991~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방위산업은 1968년 1. 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이어서 1969년 7월의 “자국의 안보는 당사국의 책임”이라는 닉스 독트린 및 주한 미군 철수에 자극을 받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기치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육성을 표명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방위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가 있었다.

<표 3-1> 국군 60년 변천사와 방위산업 발전의 관계²⁴⁾

국군 50년 변천사	방위산업 발전	비 고
건국기 (1945. 8월~1950. 6월)	태동기 (~1970년)	• 북한 ‘군비증강 금지조약’ 위반(‘57년) : 신형 장비 도입, 군비 확충 • 국군 월남파병(‘64~‘73년) 계기 : 증액된 군사경제 원조액을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계획 추진 • 국방각료회담(‘76. 9. 6일) : 북한 안보위협/국제정세 고려, 예비군 무장화, 장비 현대화, M-16소총 생산 등 합의
한국 전쟁기 (1950.6.25일)		
전쟁 피해복구 및 재건기 (1953. 8월~1950. 6월)		
국방체제 정립기 (1961~1971년) / 국군의 월남파병 (1964~1973년)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 (1972~1980년)	준비단계 (1971~1972년)	• 국방과학연구소 창설(‘70. 12월) • 방위산업진흥, 정부계획 착수(‘72년)
	기본병기 기반조성단계 (1973~1976년)	•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제정 및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준공(‘77년) • 기본병기 개발/생산기반 구축
	기본병기 기반완성단계 (1977~1981년)	• 제 1차 율곡사업 추진 • 기본병기 완전국산화 양산

24) “국군 50년 변천사와 방위산업 발전의 관계” 논자 재구성

<표 3-1> 국군 60년 변천사와 방위산업 발전의 관계

국군 50년 변천사	방위산업 발전	비 고
자주국방 강화기 (1981~1990년)	고밀정밀병기 기반조성단계 (1982~1990년)	• 제 2차 울곡사업 추진 • 고밀정밀병기 연구개발 추진
국방태세 발전기 (1991년~현재)	고밀정밀병기 개 발 단 계 (1990년~현재)	• 방위력개선사업 명칭 사용 및 21세기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과정은 태동기(1970년 이전), 준비단계(1971~1972년), 기본병기 기반 조성단계(1973~1976년), 기본병기 기반완성단계(1977~1980년), 고밀정밀병기 기반조성단계(1981~1990년), 고밀정밀병기 개발단계(1991~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미비로 일관된 정책이 이어지지 못하고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나, 국방개혁 법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1) 건국기(1945. 8월 ~ 1950. 6월)

건국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온 군사 경력자들은 국방의 책무를 통감하고 군사단체를 조직하여 건국의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이들이 조직한 군사단체는 학병동맹을 비롯한 조선 국군 준비대, 건군준비위원회, 광복군군내지대 등 30여개에 달하였다. 이 시대에는 남한의 치안과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해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를 발족하였고, 1946년 1월 15일에는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하게 된다. 이후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 군정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음에 따라 동년 9월 1일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역사적인 새 발족을 보게 되었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육군항공사령부를 독립시켜 공군으로 발족시킴으로써 국군은 명실상부한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한국 전쟁기(1950. 6. 25 ~ 1953. 7월)

한국 전쟁기에는 북한 인민군이 사전 남침계획대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9월 15일에는 함안-다부동-포항선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한 반격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다.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전선은 계속적인 난황을 거듭하다가 1951년 6월 23일 소련 대표가 휴전을 제안한 이후 2년 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155마일 전선에서 휴전이 성립되었다. 전쟁초기에 국군의 군비는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었으나 개전 직후 유엔군의 지원과 미국의 직접군원에 힘입어 국군은 군비를 증강·확장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전쟁 피해복구 및 재건기(1953. 8월 ~ 1961. 6월)

전쟁 피해복구 및 재건기로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함께 북한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미국 정부와 합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10월 1일)을 체결하고 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 개건을 위한 대미 원조를 촉진 시키는데 주력하게 되었다.²⁵⁾ 한편, 북한이 휴전협정상의 군비증강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계속 군비증강을 추진 하자, 유엔군 측도 1957년 6월에 이르러 이 조항의 준수의무를 포기 하고 국군의 신형 장비 도입 등 군비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육·해·공군은 예하 부대들을 속속들이 창설하였다. 이 기간 중 제도적으로 발전된 부문은 1954년에 육·해·공군의 기본병과를 비롯한 각종 기술병과 교육이 시행되면서 작전, 군수, 교육의 3개 분야로 구분하는 지도체제로 개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병력관리를 병과별로 실시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국방부 직제 내에 조직되었던 육군 및 해군본부가 독립체제로 개편되어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직제로 법제화되었다.

4) 국군의 월남파병(1964년 ~ 1973년)

국군의 월남파병시기로 방위산업 발전 단계 중 태동기로서 미국은 월남전에

25) 한·미 상호방위조약 : 1953년 10월 1일 체결,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깊이 개입하면서 많은 병력이 소요되자 자유세계 군사 원조단을 창설하여 한국을 포함한 자유 우방 25개국에 대하여 월남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방부는 1964년 5월 21일 아시아의 평화와 자유 수호 및 자유 월남에 대한 공산침략의 저지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자유우방국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월남파병을 결정하였으며, 1964년 9월 11일부터 1973년까지 4차례 주월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하지만, 미국 및 연합군의 월남에서의 철수방침에 따라 주월 한국군은 1971년 12월 4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73년 3월 23일 3단계에 걸쳐 병력을 철수하였다. 파병의 성과는 최초 해외파병으로 각종 대미 지원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현재 무기/장비의 조작능력과 실전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산악전과 게릴라전에 대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1966년 월남전 참전대가로 이른바 「브라운각서」²⁶⁾에 의해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C-54 항공기, M48형 전차, M16소총 등 미미한 전력을 증강시켜 주었다. 또한, 월남으로의 노동력 진출은 당시 총 해외취업자의 70%를 차지 하여 고용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기술축적과 경험은 1970년대 중동 진출로 이어져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군의 월남 파병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으로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보장이 보다 확고하게 되었으며, 증액된 군사경제 원조액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군 현대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5) 국방체제 정립기(1961년 ~ 1971년)

1960년대는 초반부터 세계질서의 흐름을 무시한 북한군의 4대 군사노선

26) 브라운 각서 : “월남전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 각서로 총 14개 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추가 파병에 따른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
- ② 한국군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대 1개 사단의 장비를 현대화 한다.
- ③ 베트남 주둔 한국군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가급적으 한국에서 조달한다.
- ④ 베트남에서 실시되는 각종 구호와 건설 등 제반 사업에 한국인 업자를 참여시킨다.
- ⑤ 한국의 탄약 생산을 늘리는데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다.

정책에 의한 적화통일 전략의 위협 속에서도 내실을 다진 국방 체제 정립기로서, 5·16이 일어나 2년간 군정실시, 제 3공화국의 탄생 등 정치·사회분야의 격변기를 맞았다. 특히, 이 기간에는 국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제 1차 경제개발 4개년계획과 함께 국군의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병역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 제도와 군 인사법을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에 자행된 북한 124부대(김신조)의 청와대 침투사건과 1월 23일의 동해상에 일어난 미 해군 첩보 수집함 푸에블르호 피랍사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일대에 큰 위기상황을 가져왔다. 1968년 11월 2일 울진·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 1969년 4월 15일 미 정찰기 EC-121기가 동해에서 격추, 1969년 닉슨 독트린 “방위의 1차적 책임은 자국이 져야 한다.”는 내용에서 1971년 3월 미 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 조치하고 한국군 현대화에 10억 달러 무상지원 5개년 계획 지원 약속 등 심각한 안보위협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국제정세의 새로운 사태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이라는 힘겨운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방각료회담에서 예비군의 무장화,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M-16 소총 생산문제 등을 합의²⁷⁾하여 육·해·공군 모두 획기적인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1970년대 이전까지 방위산업의 태동기를 거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부터 1972년까지는 방위산업의 준비단계로서 1970년 12월에는 자주 국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 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의 제공,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업체 연구 활동 지원 등 방위산업 육성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역 설계한 기본 장비를 국산화하는 번개사업²⁸⁾을 추진하였다. 또한, 월남 파병과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른 선행조치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27) 미국은 상기 안보상황에서 국무장관 파견한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 및 1억 달러 군사원조, M16 소총공장 건설지원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을 개최하게 된다.

28) 번개사업 :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 기본병기 개발을 위한 긴급 병기 개발사업의 가 명칭

(1971~1975)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972년 12월 29일 국방 목표²⁹⁾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준비기를 거치게 되었다.

6) 자주국방 기반 조성기(1972년 ~ 1980년)

1972년 10월 이후부터 1980년까지 제 4공화국의 정부가 자주국방의 기반 구축을 조성하고 추진하였던 시기로서 방위산업 발전단계 중 기본병기 기반조성단계(1973~1976년)와 기본병기 기반완성단계(1977~1981년)를 거치게 된다. 1970년대 들어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미 군사원조가 종식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는 우리 자체의 문제라는 현실적 인식과 더불어 자주국방 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기구를 합리적으로 통합 정리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공고히 했으며, 각 군의 조달기구 및 각 군 병원의 통합·예비군 지휘체계의 개선, 국방정책 연구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 때 상황을 사찰한 자리에서 대통령을 자주적 군사력 건설에 대한 요지를 하달하였다.³⁰⁾ 이에 1973년에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3. 2. 17, 법률 제2540호)을 제정하였으며, 1974년까지 3차에 걸쳐 번개사업(긴급병기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의 기본병기에 대한 부분적인 성능 개량과 독자적인 한국장비의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방위법세를 재정·공포하여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였다.

방위산업 육성목표는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6년까지 총포, 탄약, 통신기기, 차량 등 기본병기를 국산화한다는 것이었다. 1973년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29) 국방목표 : ①국방력을 정비 강화하여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고 국토와 민족을 수호한다.

②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고 군의 정예화를 기한다.

③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자주국방 체제를 확립한다.

30) 1970년 초의 안보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을지연습 '73”을 박대통령이 순시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지시함으로써 “국방 8개년 계획(1974~1981)이 수립되어 율곡사업으로 지칭하는 국군의 방위력 개선사업이 된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제 1차 육국사업³¹⁾을 추진하여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1980년 말까지 국방과학연구소는 총 220개 장비의 개발에 착수하여 155개를 완료하고 한국적 여건에 부합되는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제 3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었다. 또한, 국군은 전력증강과 무기체계의 해외 종속으로부터 탈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 기피 및 급격한 군사과학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다수의 민간공장에 의한 분업생산과 조립방식이라는 한국 특유의 독창적 방법으로 정보 주도하에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개발대상 장비의 TDP(Technical Data Package, 기술자료 묶음)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한국화하거나 역설계하여 방위업체에 제공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한 후 양산하는 모방개발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병기의 완전 국산화를 통한 양산과 일부 고도정밀병기의 국산화 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M60기관총, M203 유탄발사기, 20mm 발칸포, 곡사포/탄, 표준차량, 전차개조, 구축함, 한국형전투함, 다련장 로켓 등을 양산함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방위산업 육성목표는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80년 초까지 로, 1977년에는 155mm 곡사포, 500MD 헬기, 장갑차, 각종 포탄에 대한 대량 생산 돌입, 1978년에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 1979년에는 F-5E, F-5F 전투기 공동조립 계획에 합의, 1980년대에는 구축함의 국내 건조 등을 착수하였다. 이로써 국내 무기소요의 대부분을 충족하자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방위산업 가동률은 급격히 저하된다. 이 기간 동안 기본병기의 양산체제가 구축 되었으며, 고도 정밀병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한 시기였다.

31) 자주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974년 2월 25일(1974~1981)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제 1차 전력증강계획을 확정하였는데 보안유지를 위해 “육국계획”이라고 가 명칭을 붙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침입을 예견하고 10만 양병론을 주장했던 육곡 이이 선생의 호를 딴 것으로 유비무환 사상을 본받고자 하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제 1차 육국사업기간 8년 동안 총 가용액 3조 6,076억 원(국고 2조 7,702억 원, FMS차관 8,374억 원)중 차관원리금 상환액 4,674억 원을 제외하고 실 투자비는 3억 1,402억 원이었다.

7) 자주국방 강화기(1981년 ~ 1990년)

자주국방 강화기로서 1980년대에 우리 군은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력격차를 좁히기 위해 군사전략 개념의 부분적인 수정과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방위산업 및 연구개발능력의 제고와 제 2차 율곡사업³²⁾을 착실히 추진하여 이 시기에 비로소 전략 증강면에서 북한군과의 전력 격차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으며, 전략개념도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상대방이 전면전으로 도발해 올 경우 공세적 군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개념의 도입이 시도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또한, 1970년대 “방위 산업의 기반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하의 집중적인 육성지원 그리고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중화학공업 육성과 병행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방위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이전까지 정부주도육성정책으로부터 민간주도의 자율적 경영에 입각한 자생능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983년부터 방위 산업체가 계획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의 장기 소요량을 이들 업체에 사전 통보하는 한편, 관리방침을 마련하고 1985년에는 부품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또한, 군의 무기체계가 고도의 정밀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경제성 및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부득이 선진국으로부터 고가의 고도정밀무기를 해외에서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과도한 외화지출을 막는 방법으로 1983년부터 군사절충교역제도(OFF-SET)를 수립, 시행하였다. 이는 막대한 외화를 지출하는 대가로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여 방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부품의 역수출 등 작업물량의 획득으로 방산업체 경영 상태 개선 및 후속 군수 지원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내 소요 한계에 다다른 방산물자의 수출증진을 위해 긴밀한 대미 협력활동을 통하여 수출 통제를 완화하였고, 제 3국의 시장개척으로 수출 선의 다변화를

32) 1982~1986년까지의 제 2차 율곡사업에서는 제 1차 율곡사업에서 얻은 교훈과 1988년 올림픽 개최시기인 안보 취약기에 대비하여 “방위력 전력완비”와 “억제전력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변경하였다.

모색하는 등의 다각적인 수출 진흥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종래 국방부에서 직접 담당하던 수출통제 행정업무를 1984년 방산진흥회로, 1985년 6월에는 일반 방산물자 및 일반 군수물자의 조정통제 업무를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여 방산물자 수출제도상의 경직성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방위산업 발전과정 중 고밀정밀병기 기반조성 단계로서 1981년부터 고도 정밀병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한국형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성능 개량, 고도 정밀병기의 선별적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고도 정밀병기의 연구개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연구개발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를 대덕연구 단지로 통합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등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방위산업의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산·학·연의 연구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 국방연구개발에 전문화된 기술을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의 기술도입선을 종전의 대미 일변도로부터 영국, 이탈리아 등 제 3국으로 다변화하면서 다원적인 해외기술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선진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한국형 소총을 비롯한 한국형 전차, 장갑차, 다련장 로켓, 함대함 유도탄의 개발과 155mm 곡사포의 개량, 한국형 구축함 건조 사업과 잠수함 생산계획추진, F-4D/E의 추가 도입 등 생산 및 배치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과제를 한국적인 여건과 전략개념에 부합되게 개발하고 고도 정밀병기 양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8) 국방태세 발전기(1991년 ~ 현재)

국방태세 발전기는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하는 1990년대로서 오늘의 국군의 참 모습을 찾는 시기로 통합 전력 발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군 구조개선, 방위력 개선, 국방 정보화,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비 전력관리 및 동원태세 확립 등 모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미래 지향적인 정예 군사력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한 억제전력의 보강과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핵심전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추진해 온 전력증강사업(1·2차 율곡사업)을 1990년대에도 방위력 개선사업³³⁾으로 연계시켜 계속 추진함으로써 외부의 침략에 대한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할 수 있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지면서 1950년 UN군에 넘겨주었던 “작전통제권”중 1994년 말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환수하였다. 이로써 비록 전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에 우리 군의 일상적인 작전활동은 합참의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2006년 10월 9일 북한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10월말 제 3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시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 완료키로 합의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은 “합리적인 방위력 개선 개념 설정과 효율적인 개선방안 구현”이라는 기본 방침 하에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한 억제 전력의 보강과 장기국가안보 전략차원의 자주적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주요무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첨단 국방과학 기술과 방위산업 기반에 조기에 구축하는 등 기술 집약형 전략구조로서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시기는 방위산업 발전과정 중 고도정밀병기 개발단계로 미래의 전쟁은 첨단 C4ISR체계와 원거리 정밀타격을 위한 PGM을 활용한 과학기술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도적 기술에 집중 투자 하여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함대함 유도무기, 초음속 훈련기 T-50을 개발, 군 위성통신 (무궁화 5호, ANSSIS)발사³⁴⁾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33) 1990년대 방위력 개선사업은 1970~1980년대 율곡사업이라 명명된 이 사업을 전력증강사업, 전력정비 사업 이라고도 불리어졌으나, 1996년 1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4) 2006년 8월 22일 발사된 한국의 첫 군 통신위성으로, 군용 중계기뿐만 아니라 한국통신(KT)에서 운용할 민용 중계기도 탑재되어 있는 민·군 공용 통신위성이다. 2007년 말경 배치/운용예정인 아나시스(ANASIS)로 불리는 군 위성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07년 말에 전력화 및 체계운용을 목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의 방산체제로는 미래의 자주적인 전력획득 및 국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서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난 2006년 1월 1일부로 방위사업청³⁵⁾을 신설하여 국방획득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 발전과 방위산업물자의 조달에 기여하기 위해 1973년 2월에 제정한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06년 9월 11일 방위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새로운 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여 미래 선진군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부터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방위산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고 국내·외로 판로를 하고 있다. 아래 <표 3-2>에서처럼, 1975년부터 2007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구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 방위산업 일반현황(1975~2007년)³⁶⁾

년도	방위산업체수 / 품 목 수	방산매출액 (억 원)	방 산업 체 총 매출액 (억 원)	방산비중 전업률(%)	방 산 가동률(%)	방 산 인력수	방산 수출액 (만 달러)
1975	- / -	168	1,432	1,173	-	-	47
1976	- / -	441	3,344	1,319	-	-	232
1977	- / -	576	5,810	991	-	-	810
1978	- / -	1,393	13,756	1,013	-	-	1,641
1979	- / -	2,033	15,027	1,353	-	-	7,865
1980	- / -	3,297	17,049	1,934	-	-	11,711

35) 방위사업청

국방획득분야에 대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 및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참여정부 출범이후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Zero-Base에서 근본적 전면적 개혁방안을 모색한 결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2006년 1월 1일부로 출범.

36) 방위사업청, 「2007년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2008, p.78

<표 3-2> 방위산업 일반현황(1975~2007년)

년도	방위산업체수 / 품 목 수	방산매출액 (억 원)	방 산업 체 총 매출액 (억 원)	방산비중 전업률(%)	방 산 가동률(%)	방 산 인력수	방산 수출액 (만 달러)
1981	- / -	4,413	28,133	1,569	-	-	12,541
1982	- / -	4,660	46,156	1,010	-	-	16,766
1983	- / -	6,381	53,226	1,199	-	-	300,129
1984	- / -	6,028	67,343	895	664	-	11,631
1985	- / -	7,394	79,010	937	690	-	10,635
1986	- / -	10,532	93,244	1,130	778	-	9,303
1987	- / -	11,232	105,985	1,060	7558	-	15,050
1988	- / -	13,841	120,772	1,146	653	23,418	12,992
1989	- / -	13,431	139,587	962	583	25,670	12,518
1990	83 / -	15,013	215,332	697	556	-	7,800
1991	84 / -	17,567	258,383	680	569	27,794	9,097
1992	54 / -	20,263	183,962	714	598	26,349	2,650
1993	85/298	19,362	429,938	4.50	54.2	21,428	5,888
1994	81/-	22,012	516,288	4.26	56.1	28,219	5,993
1995	83/-	25,176	669,700	3.76	56.0	30,696	7,698
1996	82/-	30,131	718,910	4.19	55.7	29,640	3,194
1997	81/-	14,402	820,749	4.20	56.9	-	6,937
1998	80/-	33,845	842,570	4.02	51.8	36,653	6,149
1999	78/-	31,211	933,798	3.34	50.8	25,584	13,454
2000	76/1,106	33,359	631,420	5.28	48.5	20,668	5,537
2001	78/1,136	37,013	524,899	7.05	50.3	21,916	23,720
2002	83/1,194	43,447	-	8.0	54.5	23,179	14,426
2003	82/1,235	42,681	-	7.9	57.3	23,184	23,770
2004	86/1,324	46,440	-	7.4	56.1	23,133	41,766
2005	88/1,405	53,165	-	8.0	57.8	22,347	26,233
2006	85/1,391	54,517	-	-	61	-	25,523
2007	86/1,423	-	-	-	-	-	84,493

우선 1980년대 중반까지 방위산업은 주로 재래식 무기체계 측면에서 전력증강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중화학 공업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이후 방위산업의 경영 상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기본 병기류에 대한 군의 소요가 거의 충족되었고, 또한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도 미국의 수출통제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기술 지원 하에 개발 및 생산된 대부분의 방산물자는 제 3국 수출시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금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정부 또는 미국업체의 기반유지에 필요한 관심 대상기술을 상용화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8%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토록 되어 있다.³⁷⁾ 그렇기 때문에 1999년 이후에는 방위 산업계의 평균 가동률 50% 수준에 그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공, 통신전자, 기동 등의 분야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1~2007년간 연도별 수출 실적은 일반 상품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형과 달리 일시적인 증가 및 감소 등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래 <표 3-3>처럼 2004년은 함정 분야 수출 증대로 4.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2001~2004년 참여 정부 출범 후 방산수출 활성화 시책의 결과이며, 2007년은 함정분야 및 T-50 기본 훈련기 터키 수출 성사로 인해 사상 최대 수출(8.4억 달러) 실적을 가져왔다.

<표 3-3> 연도별 주요 수출내용³⁸⁾

년 도	수출실적	주요 수출품목
2001	2억 3,720만 불	K-9 부품(터키, 6,502만 불), 5톤 차량(모로코, 2,009만 불) F-16 엔진 창정비(베네수엘라, 3,991만 불) 다목적 병원선(인니, 3,529만 불)
2002	1억 4,426만 불	K-9 부품(터키, 6,509만 불), KT-1(인니, 3,294만 불)
2003	2억 3,770만 불	F-15K 부품(미국, 6,274만 불), K-9 부품(터키, 3,758만 불) 잠수함 정비(인니, 5,999만 불), 상륙함 성능개량(인니, 1,199만 불)
2004	4억 1,766만 불	대륙상륙정(인니, 14,997만 불), F-15K 부품(미국, 6,587만 불) K-9 부품(터키, 4,802만 불)
2005	2억 6,233만 불	F-15K 부품(미국, 9,450만 불), K-9 부품(터키, 2,374만 불) KT-1(인니, 2,300만 불), 25톤 차량(태국, 1,414만 불)
2006	2억 5,523만 불	F-15K 부품(미국, -), K-9 부품(터키, -), 탄약류(-, -)
2007	8억 4,493만 불	F-15K 부품(미국, -), T-50(터키, -), K-9 부품(터키, -)

다음 <표 3-4>에서 보면 방산업체의 매출액 및 가동률은 1998년 IMF 위기 및 국내 방산 소요물량의 감소 등으로 잠시 저조했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제조업체와 비교해볼 때

37) 배일성, “우리나라 방산물자의 수출증대 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p.33

38) 방위사업청, 「수출현황 파악」 내부자료, 2006

전체 방산업체의 경영(가동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 3-4> 전체 방산업체 경영실태(1997~2006년)³⁹⁾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억 원)	34,402	33,876	31,211	33,359	37,013	43,447	42,681	46,440	53,165	54,517
경상수지액 (억 원)	-1,301	-1,237	-1,287	-1,762	-1,149	253	555	863	1,486	2,673
가동률 (%)	방산	56.9	52.8	50.8	48.5	50.3	54.5	57.3	56.1	61
	평균	79.9	71.1	76.6	78.3	75.3	78.3	80.3	79.8	81

일반제조업 평균 가동률 대비 방산업체 가동률이 저조한 원인은 방산물자 수요처가 군에 한정되어 추가적인 내수물량 창출이 어렵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독자적 방산 제품 부족으로 방산 해외수출이 일부 품목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반 제조업 가동률에 비해 그 차이가 20%이상으로 지속해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누적된 적자를 보이는 방산업체 경영난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 테크윈, 대우인터내셔널, 한화, 풍산, 로템, LIG 넥스원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방산업체들은 실익이 없는 방산부분의 매출비중을 5%대로 낮게 유지하며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는 독과점적 지위 및 내수에 의존한 경영으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다음 <표 3-5>와 같이 방위산업체의 방산부분 자기자본 수익률은 전체 제조업 평균(12.2%)의 2/3수준에 불과한 8.1%에 머물고 있으며, 가동률 역시 제조업 평균(79.8%)의 3/4 정도인 57.8%를 기록하고 있다.

<표 3-5> 국내 방위산업체 경영성과(2005년 기준)

구 분	자기자본 수익률	1인당 매출액	가동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2004)
방산업체 현황	8.1%	2.4억 원	57.8%	0.4%
비 고	12.2%(제조업)	5.0억 원(제조업)	79.8%(제조업)	중국 1.7% 이스라엘 1.6%

39)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6년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2006, p.31

이러한 방산업체의 저조한 수익성은 필연적으로 방산업체의 채투자를 제한하게 마련이며, 아래 <표 3-6>와 같이 최근 방산투자 규모는 점차 감소되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6> 방산투자 규모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방산 투자(억 원)	7,590	5,873	5,099	4,442	4,492	4,830

또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 하에 방산물자 및 업체를 지정, 관리하면서 생산 및 조달 보장, 소요 자금 및 기타 기술개발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보장하고 있는 동시에 업체 경영권 변동 허가제, 방산물자 매도명령제, 원자재 비축 명령제 등 각종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는 1973년 도입되었으며,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일부 비 무기체계)와 구 주요 구성 품에 대하여 방산 물자 및 업체를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양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현재 86개의 업체가 있으며, 1,400개의 방산물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표 3-7> 분야별 방산업체 지정 현황(2007년 6월 기준)

분야		계	화력	탄약	기동	항공유도	함정	통신전자	화생방	기타
방산업체수		86	12	8	12	12	8	16	2	16
방산물자	소계	1,400	175	324	138	432	112	125	34	60
	완제품	386	33	112	37	28	28	82	19	47
	부품	1,014	142	212	101	404	84	43	15	13

그 동안 50여개의 방산업체가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취소사유는 기업 간 인수·합병이 19개(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인한 지정취소가 12개(24%)이며, 그 이외에는 군 수요 충족으로 인하여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과 발전기·컴프레샤 등 일반 상용화된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순이다. 현재에도 경영부실·악화로 인하여 부도되거나 법정관리중인

업체도 다수이다.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 시 중복투자 방지 및 적극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업체의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2008년 현재 11개 무기체계 분야에 전문화 업체 34개, 계열화 업체 52개를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표 3-8> 전문화·계열화 지정 현황(2008년 기준)

구분		계	탄약	기동	항공	유도	함정	통신	정보전자	지휘통제	광학	화생방
전문화	품목	31	4	2	3	6	1	1	3	1	3	3
	업체	34	3	3	1	2	4	3	3	2	5	4
계열사	품목	87	14	9	23	15	9	0	4	1	5	1
	업체	52	6	11	13	10	6	0	1	0	0	1

전문화·계열화 제도는 1983년에 도입되어 방위산업 초창기에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력 제고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기존 지정업체에게 지나친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기술개발 정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정책적 계획을 보면,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2008년 말에 폐지할 예정이고, 폐지에 따르는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에 새로 도입된 ‘사업조정제도’의 구체화 및 중소기업 보호대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 제도로 1980년에 설치된 방산육성기금은 2005년 정부기금 통합 폐합 방침에 따라 2006년 12월에 폐지되었으며, 2006년 말 연구개발, 원자재 비축, 유허 설비 유지 등에 총 1,417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방산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지속적 방위산업체 금융지원을 위해 일반 회계를 활용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3. 방위산업의 문제점 분석

1) 현 안보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국방비 편성

미래전을 대비한 최첨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된다. 국방비는 크게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군의 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부흥한 장병 복지 개선 및 급식·피복 등 소비성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경상운영비로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비는 1980년대 이후 국방비의 하향 배분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이후에는 급격한 하향배분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력증강 등 국방운영의 여러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 외환위기의 도래 그리고 교육 및 복지에 예산 등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국방예산은 상대적인 압박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압박이 국내 수요 감소를 유발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표 3-9> 국방비 증가율⁴⁰⁾

구분	1980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DP대비(%)	6.0	4.4	3.3	3.1	2.8	2.47	2.98	2.43	2.43	2.60	2.66	2.72	2.76
정부재정대비(%)	34.7	24.2	21.3	16.4	16.3	15.5	14.9	14.8	15.8	15.6	15.3	15.5	15.2
증가율(%)	46.2	10.4	9.9	-0.4	5.3	6.3	6.3	6.5	8.1	11.4	6.7	8.8	8.8

현재 각 국의 국방비는 안보 위협이 높은 정도에 비례하여 배부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국방비는 냉전종식 이후 일시적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993년에 2.8%에서 2000년대에는 3.8%로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6~2007년도에 2.66~2.72%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을 고려시 세계에서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면서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 분쟁국 또는 대치국들의 평균 GDP에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40)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3, p.16

<표 3-10> 세계 각국의 국방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GDP	7913	125000	45900	22,200	15,600	22300	21500	28000	1,230
국방비	206	4620	439	1,040	580	517	531	380	98
증가율(%)	2.6	4.0	1.0	1.3	3.7	2.3	2.5	1.4	8.0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전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우리군의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기술 위주의 군 구조 및 전력체계 구축’과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계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국방개혁 등의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나 복지예산 증대 등 국가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향후 국방비의 추가적 증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2)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실태 분석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해 제기된 5개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계획으로 이는 5년 단위로 매년 연동·보완된다.

이러한 국방중기계획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의 대상기간 연 부액이 과소 또는 과대 편성 될 경우 이는 차기년도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에 큰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의 측면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 연부액의 과소 편성은 확보예산의 부족으로, 과대 편성은 그것의 예산반영 제한으로 이어져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연 부액의 균형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방중기계획은 그것의 실행에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되므로, 연 부액 편성은 국방중기계획사업의 실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은 실현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계획의 예산반영 측면에서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예산반영 현황은 그러한 실현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예산반영률은 초년도의 경우 평균 9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말기로 갈수록 예산반영률은 낮아져 말년도의 경우 평균 반영률은 83.6%에 지나지 않는다.

<표 3-11>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예산반영현황(1990~2006)

단위: 억 원

연 도	실제예산	국 방 중 기 계 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990	66,378	-	-	-	-	-
1991	74,524	83,155	-	-	-	-
1992	84,100	87,097	94,168	-	-	-
1993	92,154	96,611	98,217	106,543	-	-
1994	100,753	107,482	107,668	109,201	120,379	-
1995	110,744	113,694	120,070	120,042	121,608	136,505
1996	122,434	123,967	127,324	134,600	133,804	136,867
1997	137,865	138,188	137,474	142,324	130,602	149,408
1998	138,000	*	154,276	152,325	158,356	168,671
1999	137,490	164,998	*	173,663	168,740	176,162
2000	144,774	145,327	185,623	*	192,965	186,874
2001	153,884	153,053	153,175	207,898	*	211,972
2002	163,640	163,117	162,237	161,293	231,806	*
2003	145,148	173,967	172,904	171,971	171,777	257,305
2004	189,412	207,484	184,909	183,278	182,289	183,881
2005	211,026	208,226	224,083	196,336	194,275	193,226
2006	225,129	235,500	235,500	240,822	208,941	205,895
평균반영률(%)	-	95.9	94.0	90.9	87.5	83.6

<표 3-12>와 같이 2000년도 이후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예산 반영률을 나타내는데, 초년도의 평균 예산반영률도 93.1%로 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평균 예산반영률은 90%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그동안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표 3-12>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예산반영현황(2000~2006)⁴¹⁾

단위 : 억 원

연 도	실제예산	국 방 중 기 계 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000	53,437	-	-	-	-	-
2001	52,141	58,750	-	-	-	-
2002	54,756	57,049	63,683	-	-	-
2003	57,328	59,455	62,435	68,907	-	-
2004	62,930	71,196	66,968	68,400	74,281	-
2005	70,656	70,851	84,422	72,810	74,994	80,223
2006	74,994	83,003	83,603	90,992	82,059	82,255

한편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는 사업 명 대상기간의 연 부액 편성기준 즉, 기준 연부 율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표 3-13>과 같다.

<표 3-13> 국방중기계획의 사업별 기준 연 부율⁴²⁾

단위 : 억 원

연 도	대 상 기 간 기 준 연 부 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단년차사업	100	-	-	-	-	100
2년차사업	40	60	-	-	-	100
3년차사업	30	40	30	-	-	100
4년차사업	25	30	30	15	-	100
5년차사업	20	25	30	15	10	100

3) 방위력개선사업비 불안정성의 원인과 문제점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예산요구안의 적지 않은 부분이 매년 삭감·조정되고 있는 현 실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방위 개선사업비의 비합리성이다. 국민 복지요구수준의 점진적 증대 등으로 정부 재정여건이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무기체계의 첨단화·고가화로 인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소요증대는 방위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그것의 안정성 저하와 직결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 연 부액의

41) 국방부,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한국국방 연구원, 2006, p.191

42) 국방부, 「'07-'1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2005

비합리적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은 계획의 실현성을 저하시켜 계획된 예산의 불안정한 확보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예산확정절차의 문제이다. 방위력개선사업비는 국방 기획 관리제도의 기획, 계획, 예산편성단계를 통해 작성된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예산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검토와 국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표 3-14> 연도별 국방예산요구안 삭감·조정 현황(1999~2007)

연도	구 분	요 구 안	정 부 안		국 회 조 정	
		금액(1)	금액(2)	금액(2-1)	금액(3)	증감(3-2)
1999	계	153,499	137,490	-16,357	197,490	-
	방위력개선비	61,534	41,403	-5,234	41,403	-
	운영유지비	93,965	96,087	-11,123	96,087	-
2000	계	155,499	144,838	-10,661	144,774	-64
	방위력개선비	61,534	53,437	-8,097	53,437	-
	운영유지비	93,965	94,404	-2,564	91,337	-64
2001	계	156,928	153,754	-3,174	153,884	130
	방위력개선비	58,213	52,137	-6,076	32,141	4
	운영유지비	98,715	101,617	2,902	101,743	126
2002	계	166,055	163,640	-2,415	163,640	-
	방위력개선비	57,687	54,756	-2,931	54,756	-
	운영유지비	108,368	108,884	516	108,884	-
2003	계	184,607	174,064	-10,543	174,264	200
	방위력개선비	62,912	57,328	-5,584	57,328	-
	운영유지비	121,695	116,736	-1,959	116,936	200
2004	계	224,850	189,412	-35,438	189,412	-
	방위력개선비	82,471	63,000	-19,471	62,930	-70
	운영유지비	142,379	126,412	-13,967	126,482	70
2005	계	221,131	208,226	-12,905	208,226	-
	방위력개선비	76,715	70,851	-5,864	70,656	-195
	운영유지비	144,416	137,375	-7,041	137,570	195
2006	계	233,212	228,632	-1,580	225,129	-3,503
	방위력개선비	83,440	79,671	-3,769	74,994	-1,677
	운영유지비	149,772	148,961	-811	150,135	1,174
2007	계	247,505	246,967	-538	244,972	-1,995
	방위력개선비	69,103	68,243	-860	66,907	-1,436
	운영유지비	178,402	178,724	322	178,165	-559

그런데 국방 기획 관리제도의 제 단계를 거쳐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작성된 예산요구안이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검토·심의과정에서 일시적 경제상황이나 정치논리 등으로 쉽사리 삭감 또는 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예산요구안은 위협분석으로부터 설정된 국방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력 건설소요 충족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요구안이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 없이 비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쉽사리 삭감·조정되는 것은 그것의 합리성 구비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 건설 그리고 국가안보의 큰 저해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위개선사업비의 안정성 저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한국군이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전략구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 방위개선사업비의 안정성 저하는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추진에 큰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표 3-15> 무기체계 예산 요구안 삭감·조정 현황

구 분	무기체계	요구액(A)	확정액(B)	삭감·조정액(A-B)
지상	K1A1전차	3,484	3,091	393
	대구경다련장 탄약	1,020	920	100
	K-2소총	124	20	104
	한국형지뢰살포기	296	182	114
	3탄약창 확장	26	15	11
	102기갑여단 개편	340	310	30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91	3	86
	지상전술C41	256	198	58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70	59	11
	차기구난장갑차	23	0	23
	소계	5,829	4,857	972
해 상	보조선박	349	149	200
	차기고속정	401	356	45
	KDX-III	4,121	4,051	70
	제주해군기지	6	0	6
	고속상륙정	412	408	4
	소계	5,289	4,964	325

<표 3-15> 무기체계 예산 요구안 삭감·조정 현황

구 분	무기체계	요구액(A)	확정액(B)	삭감·조정액(A-B)
공 중	조기경보통제기	672	372	300
	차기유도무기	258	10	248
	F-15K	9,446	9,334	112
	휴대용대공유도탄	496	396	100
	K H P	661	562	99
	현무 성능개량	1,451	1,356	95
	함대함유도탄	350	330	20
	30mm자주대공포	617	366	51
	발칸 성능개량	176	166	10
	단거리대공유도무기	1,465	1,409	56
	소계	15,592	14,501	1,091
계	27개	26,710	24,322	2,388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군 전력구조 현대화에 필수적인 전력증강사업들의 추진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제한으로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화포, 전투기의 42~72%가 구형장비임을 감안할 때, 방위력개선사업비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안정성은 방위산업의 육성과도 직결된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명확하고 일관된 방위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안정성이 구비되었을 때 그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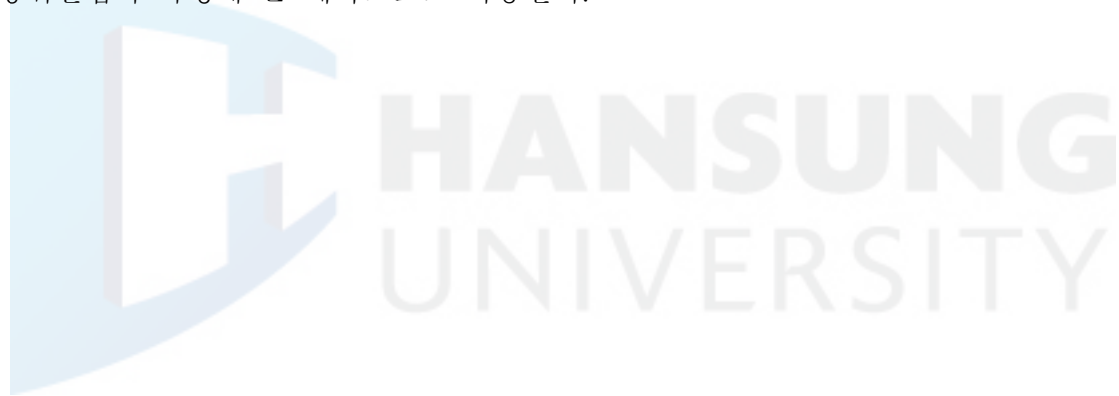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명확한 중·장기 방위산업정책을 제시할 수도, 추진할 수도 없다. 전국 이러한 방위산업정책의 표류는 방위산업 기술기반의 질적 확충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위주의 단기적 군사력 건설정책을 지속하게 하고, 이는 방위산업의

기반육성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중·장기 소요물량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 계획된 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조정은 방산물자 생산 시 소요되는 투입비용의 부족으로 금융비용의 과다 발생을 초래하게 되고, 유희시설·인력의 발생으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곤란하게 한다.⁴³⁾

더구나 그 동안 이 같이 삭감된 사업들은 국방예산 편성체계상 기획, 계획단계로 다시 환류(feedback)되지 않아 그것의 파급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왔다. 결국 불안정한 방위력개선사업비 확보실태는 방산물자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대외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방산업체 경영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비합리성과 예산확정절차의 문제에 기인하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불안정성은 한국군 군사력 건설의 정상적인 추진과 방위산업의 육성에 큰 제약요소로 작용한다.



43) 실제로 K-2 소총을 생산했던 S&T중공업의 경우, 연간 생산물량이 15,000정(121억 원)에서 2,500정(20억 원)으로 직감함에 따라 2003년 12월 국방부에 폐업 승인을 건의하였고, 결국 적 절물량 미보장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2006년 6월말에 매각되었다.

IV. 방위산업 발전방안

1.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체계 개선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이 기준이 되는 기준 연 부율 국방 중기계획화 작성지침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기준 연 부율을 바탕으로 '07~'11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그것의 연 부액 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전체 국방재원의 부족이라는 가시적인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기준 연 부율 자체와 그 구속력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재고를 위한 기준 연 부율의 개선 및 구속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1) 기준연부율의 최소·최대치 설정

먼저 기준연부율의 최소·최대치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방 중기 계획 작성 지침 상에는 각 사업 연차별 대상기간의 연 부율 지정 값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준 연 부율 허용범위로 제시되지 않고 이와 같이 지정 값으로 제시될 경우 그 기준 자체는 단순 참고치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데, 이는 기준 연 부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연 부액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 기준연부율의 구속력 강화를 위한 연 부율 심의·조정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이와 같이 지정 값으로 제시된 기준 연 부율을 통해서는 그것의 준수여부 판단이 제한된다.

따라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연 부율 심의·조정절차 마련의 선행 조치사항으로, 현재 지정 값으로 제시되어 있는 기준 연 부율 각 연도별로 최소·최대치의 범위로 제시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대상기간 내 최소 연 부율과 최대 연 부율의 최대 격차 값을 제한하여 그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기준 연 부율 실질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것의 준수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표 4-1>의 내용과 같이 기준연부율의 최소·최대치 설정방안의 예를

들어보면, 2년차 사업의 경우 1, 2년차 각각 40%, 60%로 제시된 현재의 기준 연 부율 각각 30~50%, 50~70%의 범위로 제시함으로써 그것의 효용성 및 준수 통제의 용이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표 4-1> 국방중기계획 기준연부율의 최소·최대치 설정 예
단위 : %

구분	대 상 기 간 기 준 연 부 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2년차사업	40	60	-	-	-	100
3년차사업	30	40	30	-	-	100
4년차사업	25	30	30	15	-	100
5년차사업	20	25	30	15	10	100
2년차사업	30~50	50~70	-	-	-	100
3년차사업	20~40	30~50	20~10	-	-	100
4년차사업	20~30	25~35	25~35	10~20	-	100
5년차사업	15~25	20~30	25~35	10~20	5~15	100

2)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기준 연 부율 설정

현재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상의 기준 연 부율은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정보전자전, 기동전력, 합정, 항공기, 신 특수 유도무기, 국방연구 개발 등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획득과정상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인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 방위력개선 사업의 획득전략 부재를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정책에 따라 무기체계획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중·장기계획 작성 시에도 그 기준이 되는 연 부액 편성형태가 무기체계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러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요구되었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산출물은 미국 국방예산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 상 한국의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기준 연 부율을 제시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추후 충분한 사례연구와 합리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한국 여건에 맞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별 기준 연 부율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한국적 패러다임의 정립과 무기체계별 장기적이고 일관된 획득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3) 기준연부율의 구속력 강화와 연 부율 심의·조정절차의 마련

현재의 국방중기계획 기준 연 부율은 매년 2월말 국방부에서 하달하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작성과정에서 방위사업추진분과 위원회와 관련부서 그리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자역되는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지침과 절차상의 구속력 부재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이에 연 부액의 합리적 편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시된 기준 연 부율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동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동인으로서 기준 연 부율 자체의 구속력 강화와 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상 강제력 있는 연 부율 심의·조정절차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기준 연 부율 자체의 구속력 강화방안이다. 이는 현재 지침 상으로 하달되는 국방중기계획 기준 연 부율 그 구속력이 미약해 단순 참고치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국방 전력발전 업무규정’과 방위사업청 내부훈령인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즉, 두 규정의 국방중기계획 수립 관련조항에 기준연부율과 그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최초 국방중기계획 작성부서에서부터 그것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포함되는 기준 연 부울 지정 값이 아닌 최대·최소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은 앞서 논의한 바 있다.

두 번째로 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상 강제력 있는 연 부울 심의·조정절차 마련방안⁴⁴⁾이다.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 작성과정에서 이것이 관련부서 및 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방안은 이와 같은 심의·검토과정상에 국방중기계획(안)의 연 부액 편성을 기준 연 부울 기준으로 심의·조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기준 연 부울이 미준수된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안)으로의 반영이 제한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그것의 작성에서부터 비합리적인 연 부액 편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조정절차는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관련부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검토절차 가운데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이 작성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국방중기 계획요구서에 대한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에서 작성한 국방중기 계획요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이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가용재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보완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의·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예하정책·기획 분과위원회, 사업관리 분과 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중 그 성격상 사업관리 분과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사업관리 분과 위원회 운영규정상에 관련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 국방예산 편성의 과학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획득사업을 관리하면서 비용 및 일정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오래 전부터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는 비용·일정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내·외부

44)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시 가용자원 제한 등에 따른 전력소요 조정에 관한 절차는 「국방 전력발전 업무규정」 제 42조 제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의 각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시행될 실적 가치 관리 체계(EVMS)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기초한 실시간 성과분석의 조기 정착으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실태를 지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방산 획득제도 개선

과거 우리나라의 무기(전력) 획득정책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전력화의 긴급성과 국방예산의 제한, 군 첨단/핵심기술 수준의 열악, 과거 50년 전부터 한·미간의 협조체제와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보완성,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때문에 한·미 연합방위체제 대부분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첨단무기/전력은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우리 군은 전술적 차원의 무기체계/전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무기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위한 국외도입을 선호하게 되었고, 국내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국내 방위 산업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표 4-2> 무기체계 획득 방법별 현황⁴⁵⁾

분야	계	국 외 도 입		연구개발	주요 개발무기
		해외구매	기술도입		
계	620	400	48	172	
지휘/통제	6	5	7	1	CPAS
기동	43	19	7	17	K-1전차, K-200장갑차
화력	96	72	5	17	K-1, 2, 4, K-9
항공	37	31	·	1	KT-1
함정	16	7	·	12	KDX, FF, PKM
유도무기	20	17	3	3	현무, 어뢰
방공무기	33	27	24	3	비호, 발칸, 저고도 탐지 레이더
통신/전자	226	166	·	36	전자식 교환기, PRC-999K
정보/전자전	42	37	2	5	TOD, ALQ-88K
화생방	35	11	·	22	자동경보기, 방독면
모의훈련장비	8	8	·	·	

45) 국방부, 「정보·지식기반 국방력 창출을 위한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국방부,

이는 위의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무기의 72%(620종 중 해외 구매 400종, 기술도입 48종)를 국외도입으로 추진하였고, 항공기·유도무기·방공무기·정보/전자전 장비 등 최첨단 무기(전력)분야의 80% 이상을 해외 구매로 획득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국내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에도 대부분 체계개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핵심부품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미약하였으며, 기술도입으로 생산할 때에도 차기계획과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남에 따라 기술축적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목표 지향적 국방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군사혁신(RMA) 추구, 중점추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부품위주의 연구개발, 국산무기 우선사용 원칙에 입각한 연구개발 등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즉, 체계 및 완성품 위주에서 핵심 기술축적 중심으로, 국외도입 위주에서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조기 전력화 위주에서 방위산업 기반 구축 위주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안보상황과 주한 미군 철수,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따른 자주 국방체제 확립 등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자주국방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및 외화 지출 절감을 위해 국외 도입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주도 연구개발에서 업체 주도 및 업체 자체 연구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총 국방비의 4.3%에 불과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비를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된 것처럼 2007년까지는 5%까지 올렸으나, 2015년까지는 10~15%이상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연구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의 이원적 구조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실태를 볼 때 고난도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하여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방산업체에게 시제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주도하에 개발할 수 있는 분야는 일반 재래식 무기체계나 부품 개발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 하에서 방산업체는 무기체계 생산기반 능력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이를 응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던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방과학 산업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선진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의 기술수준, 발전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 수익성을 비교·분석하여 각각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 하더라도 기존의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개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절충교역을 통해서 항공·전자·유도무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별적으로 획득하여 저급 기술수준의 단순 무기 체계를 성능 개조·개량하고 점차적으로 복잡한 무기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의 면허 공동생산과 동시에 병행 연구개발 및 성능개량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으며, 주요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개발 및 생산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첨단 군사기술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최근 국가 간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이 국제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핵심 기술능력이 부족하면 선진국과 상호 대등한 방위산업의 기술협력을 체결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틈새전략(Niche Strategy)처럼 선진 방산국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무기체계와 핵심기술·구성품에 대한 독자적인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에 장착되는 핵심 부속체계 및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산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제한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음으로써 국내의 군소요량에 관계없이 해외 수출을 통하여 방산업체의 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절충교역에 의한 단계적인 기술도입생산을 통하여 장기적인 무기체계 독자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면허·공동 생산함으로써 선진 핵심기술을 획득하여야 하고, 첨단 무기체계 분야인 항공·전자, 유도무기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별적·중점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첨단 군사

기술의 선진화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기술 축적 및 방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비록 개발 실패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국내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군 조기 전력화로 인한 국외도입의 악순환 고리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말고 기술 중심의 순기능 사이클로 변환시켜야 한다.

3. 방산 수출과 가동률 향상 방안

국내 방위산업체의 낮은 가동률 및 기술력 등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 생산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의 전력화 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내수 확보를 통한 생산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소요물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방산물자의 수출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운용유지를 위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8~2002년까지 수출·입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산물자 수입 대비 수출은 45%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수출물자의 해외 판로 개척과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정부차원에서 미흡하였고, 방위산업체 자체적으로도 해외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안보상황 및 기타 정치적·경제적 측면 등) 입수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 강국 이스라엘은 한국에 비해 국방비가 절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은 연간 약 30억 4,000달러로 2억 4,000달러(2003년도 기준)에 불과한 한국보다 10배 이상 많다. 수출이 전제되지 않는 무기는 국내에서 개발·생산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수십 년간 지속한 결과이다. 또한, 드골 대통령은 ‘수출 없는 방위산업은 국고의 무덤’이라고 했던 것처럼 수출의 증대 없이는 방위산업의 기술진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식으로 방산발전을 위한 촉매제로서 수출 활성화를 통한 가동률 향상을 도모하였다.

SIPRI가 작성한 지난 5년간(1997~2001년)의 세계 주요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통계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22위인 반면에 수입실적은 7위이다.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항상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무기수입이 무기 수출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방산물자 수출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회사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매국을 파악하거나 구매국의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구매국에 대한 무기 획득계획, 작전성능 요구사항, 국방획득 조달주기, 정책 결정자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국가 방위산업체의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해외 시장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무관 및 군수무관을 활용하여 구매국에 대한 시장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나 수출보다는 수입에 관한 업무를 주로하고 있다. 군수무관의 경우는 아래 <표 4-3>에서와 같이 주요 방산 생산국에 국한되어 운용하고 있어 군수무관의 운용국가를 확대 및 임무를 조정(수입→수출)하거나 국방무관에 대한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획득 업무를 정규 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3> 군수무관 운용현황

구분	계	군 수 무 관
운용국가	16	미국(12명),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각 1명)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수출기업에 실시간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유 시스템과 국산방산물자 및 부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및 가격정보를 국내·외 수요자에게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산 사이버 전시관 및 온라인으로 방산물자 수출입 허가 및 국제 입찰 승인을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출입 통제지원 시스템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출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하여야겠다.

정부의 방산 수출지원 정책에 있어 고객이란 방산물자 수출업체, 해외 구매자, 수출 통제 관련 유관기관, 수출 통제 실무자, 연구개발 관련기관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절차 전산화로 인한 효율성 확보를 기본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그리고 수출입통제는 산자부의

전략물자 정보 시스템, 관세청의 통관 시스템과 타 부처 간 업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업무 효율성 및 수출 증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방산수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품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 체계 정립으로 기본훈련기(KT-1), 자주포(K-9) 등 무기체계 수출 증가에 따라 구매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정부차원의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방산수출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후속군수지원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표 4-4> 정부차원의 후속군수지원 체계 보장 요구사례

구 분	요 구 내 용
UAE	· T-50 수출 협상 시 항공기에 대한 장기·안정적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장 요구
인니	· 기 수출된 KT-1B 수출 협상 시 한국 공군 보급체계를 연계한 보다 안정적인 군수지원 요청
터키	· KT-1 수출 협상 시 이스라엘과 같은 정부차원의 군수지원 요청

이를 위해 무기를 생산한 방산업체에 기술이나 교리, 교육 전수를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적정기한까지의 부품 생산 및 지원 보장과 창 정비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창 정비 용역을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유지보수비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구매국의 차기 무기체계 도입 시 상호 호환성을 고려한 성능 개선 또한 유도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수출품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기존 각 군의 군수지원체계(종합 정비창)를 활용하여 수리부속 판매 및 정비·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수출품에 대한 교관 요원 및 기술요원 교육·훈련, 교보재 등 기타 지원요소는 구매국 요청에 의한 수시 지원체제로 추진하되 정비 지원, 수리부속 판매 등을 통한 추가적 방산수출이 가능하고 군의 후속군수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범국가적 방산수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방산수출 협력체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방산수출은 수출입 국가 간 정치·경제·외교·안보관계 및 국제사회의 통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범정부적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구매요구조건도 대응구매, 기술이전, 현지투자 등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⁴⁶⁾ 국가별 방산 시장 정보 획득 및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⁴⁷⁾ 이를 위하여 청와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산업 자원부, 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 육·해·공군, KOTRA,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 방산수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지원 협의체 구성 및 법적 근거와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출 진흥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주요 임무 및 기능으로 방산수출 추진전략 협의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전시·홍보 및 금융관련 협조체제 구축, 국내 방산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대응구매·절충교역(경협, 산업협력 등) 해소방안 마련, 개별 방산수출 건에 대한 공동협조,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 조율, 기타 방산수출과 관련된 관계기관 현안 조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산수출시 국내 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국익 저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복합 무기체계의 경우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체계, 부체계 및 탑재장비 업체 등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수출전략 수립, 현지 정보수집 채널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공동 마케팅 및 현지 에이전트의 공동 활용 등 조직적으로 공동 사업수주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⁴⁸⁾

또한, 수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수출 증가에 따라 구매국에서 자국 환경에 맞도록 수출품의 성능 및 형상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⁴⁹⁾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업체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품의 성능 및 형상 변경에

46) 고등훈련기(약 25억불 규모) 기종결정 조건 : 항공기의 경쟁력(성능, 가격) 50%, UAE와의 산업협력 50%

47) 러시아는 방산수출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및 관련기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군사기술협력 위원회” 구성·운영('07. 3월)

48) 한화(추진체·신관)와 풍산(탄약)은 공동노력을 통하여 호주 1,400만 불('04), 파키스탄 7,000만 불('07) 수출 성공

49) 터키 KT-1 수출('07)시 터키 측에서 기총 장착 및 조종석 계기판 변경 등을 요청

다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등을 위해서는 방위 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의 및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방산전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현재 국내 방산업체의 내수의존도는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내수 중심의 영업 관행으로 대부분의 방산기업이 수출관련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4-5> 국가별 방산분야 내수 의존도

구분	미 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 국
내수 의존도(%)	75	69	30	95

따라서, 내수 중심의 방산전문·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하여 첫째, 유망 방산 전문·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서비스 및 상시 수출상담 서비스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해당 지역 방산협력관과의 1:1 매칭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셋째, 지방 수출 컨설팅 상담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한편, 넷째, 해외방산 수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국내 납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며, 다섯째, 연간 방산수출 우수실적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제도를 신설⁵⁰⁾하는 등 다양한 수출기업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수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시스템 인증 획득 지원으로 방산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선진국 위주⁵¹⁾로 국제 품질보증협정이 체결되어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수출 협상 시 국제 품질보증 협정의 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수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국제 품질보증협정 체결 국가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국산 방산제품에 대한 수입국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출 협상 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50) 산업자원부는 “무역의 날”에 수출실적 우수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훈포장 및 표창 수여

51)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터키, 뉴질랜드, 그리스, 등 17개국(2006년 기준)

컨설팅, 인증심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처럼 방산물자 수출을 위해 현재 방위사업청이나 해외무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 정부차원에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일반 대기업의 『홍보부, 영업부』의 조직처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경영학 또는 마케팅 분야 전공 석·박사 채용)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대학교의 교수 및 전공요원을 아웃소싱하여 현재의 방산 수출실태와 미래의 수출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국내 방산 물자의 해외 홍보나 마케팅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산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의 타당성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분담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새로운 방산물자 개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방산 기술의 국산화와 해외 수출 향상으로 방산업체의 가동률 또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21세기 현대전은 첨단화된 정보전, 정밀 타격전, 무인화 원격전, 컴퓨터 사이버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첨단 과학무기체계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군이 요구하는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능력 부족과 재래식 병기에 대한 군 소요 격감 속에서 방산업체 가동률은 점차 하락되면서 기업 경영여건의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2020 추진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편성,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 부액 편성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방산장비 및 물자의 획득 정책은 과거 50년 전부터 한·미간 협조 체계와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보완성, 한·미 방위조약 등 때문에 전략적 차원의 첨단 무기/전력은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우리 군은 전술적 차원의 무기체계/전력을 발전시켜 왔다. 이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의 조기 전력화 및 단기적인 비용절감을 위해 국외 도입(70%~80%이상)을 선호하였고, 국내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위해 자주적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개발 추진과 국내 개발 제한 시 장기적인 절충 교역 및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획득제도를 개선하여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동률 향상, 핵심 기술 축적 등 자주 국방 실현 및 방산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방산 수출지원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방산장비 및 물자의 수출·입 현황을 보더라도 국외도입(수입)이 2배 이상 많다. 이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및 비용을 고려하여 국외도입 위주로 획득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많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생산중인 방산장비 / 물자 역시 다른 국가에 비해 뒤떨어진 것은 아닌데도 방위산업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수출지원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인 시장 개척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방위 산업청(국방부)의 수출 전략 수립, 정부차원의 마케팅 및 각종 지원정책을 유도하여야만 한다.

이처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정부 등이 다양한 조직들이 개별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방위 산업체는 가동률을 향상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주국방 실현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논문의 의의는 미래의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있었으나, 제한적인 자료(기관/업체 미제공)와 비밀 분류로 인해 일반 공개가 한정되어 있는 과거 및 최근의 방위산업 현황 및 실제 방위산업체의 의견들이 자세하게 취급 되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정부차원에서 산·학·연이 상호 연계되어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이민룡, 『한반도 안보전략론』, 봉명, 2001
- 김철환, 「방위산업의 이론과 실제」, 국방대학교, 2003
- 국방부,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3
- 국방부, 「정보·지식기반 국방력 창출을 위한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 국방부, 2003
- 박창권 「과학기술과 미래 진」, 차영구·황병무 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04
-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연경문화사, 2004
-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개혁위원회, 2005
- 국방부, 「'07-'1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2005
- 국방부, 「2006 국방백서」, 2006
- 구영완, 「방위산업의 이론과 실제」, 국방대학교, 2006
- 국방부,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6
- 방위사업청, 「수출현황 파악」 내부자료, 2006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6년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2006
- 한겨레 21, 「군사대국 일본이 진군한다」, 2006. 11, 제 635호
- 방위사업청, 「2007년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2008

2. 논 문

- 배일성, “우리나라 방산물자의 수출증대 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 김병수, “한국 방위산업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 권태영, “미·일·중·러의 군사력 변화와 한국방위력”, 한국군사학회, 2005
- 김현수, “통일 한국을 위한 국방 정책 방향”, 한국군사학회, 2005
- 박영신, “남북통일이후 군사력 운용방향”, 국방대학교 연구보고서, 2005
- 옥황임, “방위산업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5
- 권재상, “방위산업과 군사력 건설”, 제 40집, 2006
- 국가안보보좌관, “국방과학기술 현황 및 발전전략”, NSC 보고자료, 2006

ABSTRACT

Development plan and direction of the korea defense industry to conform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hange

Kim, Hwa-jin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ce Managem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Considering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military threats, defense industry is the source of defense capabilities, also it is the key element. Additionally, by stimulating defense industry, we can establish self-reliant defense system as well as improve our nation's economy and its competitiveness.

To stimulate defense industry,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working on investing in R&D and supporting private enterprises, etc. However, this can't be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First, Compiling defense budget that isn't appropriate to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situation and R&D investment to develop distinctive weapon system are in the low level. Also, assuring major domestic technology capabilities have been limited as pursuing oversea-centered acquisition project in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early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and domestic R&D/production capacity were limited and a lot of money is being spent to maintain equipment from overseas.

There aren't many experts engaged in defense industry and support system to export defense industry assets to overseas is in the low level. These issues from minor area have led to lowering the operating rate of defense industry enterprises and export rate even when importing from overseas.

Therefore, to stimulate defense industry, defense budget has to be organized appropriate to the current national security situation, promote domestic R&D in the long term, assure major technology capabilities through joint R&D along with eclectic trade and improve the operating rate of defense industry enterprises.

Moreover, to specialize the personnel who are doing defense industry missions, a new training system has to be introduced and by sharing information in real time among defense industry enterprises, exporting countries, government-related agencies and automating all work process, the basis for export has to be established.